<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 경기불황과 특수단체의 존립

제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내경기의 불황이 장기화하자 제조기업들이 인건비를 비롯 각종 경비 줄이기를 본격화, 이의 일환으로 경직성 준조세 성격의 협회비를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화학기업들은 특화된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시세의 흐름이 급변함에 따라 수익구조가 갈수록 악화되자 96년부터 각종 경비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인건비를 비롯해 회사내 경비 감축은 물론 효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고정 납부하고 있는 협회 또는 조합회비를 줄이기 위해 협회 또는 조합을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소속 60~70여개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수출입시 부과되는 수수료 징수문제와 수입추천업무 이관문제로 수출입협회와 집단마찰을 빚고 있다.
의약품수출입협회 소속 82개 제약회원사 중 동아제약, 녹십자 등 65개 제약회사들은 최근 불황기에 달러(수출입액)당 0.6~0.8원씩 받는 수수료 징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탈퇴서에 연대서명하는 한편 수출입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의약품 수입추천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해 수수료없이 서비스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제약기업들의 움직임은 최근 불황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고 제약협회 회원사가 수출입협회 회원사여서 이중 가입으로 준조세성 단체경비가 늘어나자 이를 줄여보자는 방편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의 대대적인 정비방침을 밝힘에 따라 수출입 관련업무를 가능하면 제약협회로 귀속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제약기업들은 제약협회와 수출입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동아제약의 경우 96년 제약협회에 3720만원의 회비와 수출입협회에 2985만원의 수출입 수수료를 지불, 수출입업무를 일원화할 경우 그만큼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준조세경비를 줄이고 업무를 제약협회로 일원화하려는 제약기업과 수출입협회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수출입협회의 존립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출입협회 회원사는 한약수입업자를 포함해 480개로 이중 제약기업들이 96년기준 연간 운영비 13억원 중 10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어 제약 회원사들이 탈퇴할 경우 협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화학기업들이 준조세 성격의 협회비를 내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대림산업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가 석유화학 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 90년대초부터 협회 탈퇴를 공언한 바 있으며, 93~94년에는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등 탈퇴를 위한 행동을 개시한 바 있다. 다만, 동조세력 규합이 여의치 않아 본격적으로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협회 및 단체의 역할 불충분 문제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비슷한 단체에 이중삼중으로 가입함으로써 회비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이 점 또한 깊이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학산업계에는 석유화학협회와 정밀화학진흥회가 공업발전법상의 특별법인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외에 업종별 전문단체는 페인트·잉크조합을 비롯 프라스틱조합, 염·안료조합, 계면활성제·접착제조합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중에서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것은 업종별 전문단체가 아니라 의약품수출입협회와 같이 수출입이나 인허가와 관련된 법적 단체 또는 정부 관련업무 이관단체이다. 이들 단체들은 관련기업들이 가입하지 않고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관련업무를 대행하거나 이익단체로서의 로비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반강제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정부 관련부서 퇴직자들의 퇴출창구로서의 역할이 지나쳐 각종 비리를 저지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공무원들의 「목구멍」을 위해 「상호양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산업의 건전한 발전까지를 왜곡하고 있다.

비효율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특수(?)단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화학저널 1997/10/6>